

민주주의

차례

1. 민주주의 총론
2.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한 반론
3. 민주주의 3단계론
4. 민주주의 2단계 완성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5. 민주주의 3단계를 위한 제언

1. 민주주의 총론

□ 민주주의 그 위대함에 대하여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게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인정하지만, 절대적인 사상은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 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의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 성숙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실적은 인정하면서도 참여정부가 경제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와는 별개라는 생각은 전제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야 사회적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자본이 충실하게 됩니다. 지식과 문화가 경제의 핵심요소가 되는 시대에는 자유와 창의가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유와 창의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에서 꽃이 핍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또한 민주주의의 속성입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민주주의는 인간의 행복·존엄을 중심에 놓고 있는 사상

왜 민주주의인가?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알지를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읽어 보면 소설보다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볼수록 더욱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치도 알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씹을수록 더 맛이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인가? 자유, 평등, 인간의 행복, 인간의 존엄, 이것을 중심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상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그 이후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에 근거한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뭐냐? 신뢰, 원칙, 연대, 개방, 이런 개념을 사회

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브라질에서 세계경영경제학회가 모여서 경영·경제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회적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나라, 높은 나라가 경제와 경영에 성공한다, 이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신뢰와 원칙, 규범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 사회의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모두 포섭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분파를 만들고 투쟁과 타협으로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사상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사생결단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제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또는 극단적 사상으로는 상대방을 억압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동체 속의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통합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가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야말로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정통성을 통한 권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정당한 권력은 정통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제도에 의해서, 국민 주권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대의제도에 의해서 자기 지배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권력은 항상 사유화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놨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 권력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치주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 이런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다.

(원광대 특강에서 2007. 6. 8)

2.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한 반론

□ 이 나라 민주세력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말인지 묻고 싶어

요 근래 와서 ‘민주세력이 무능하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가, 이른바 수구진영, 수구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민주세력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진보적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해 놓은 것이 없다, 국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키질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실용적 관점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무능했다, 이렇게 고백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참여정부 4주년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 1. 31)

요즈음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냉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세력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 민주세력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말입니까? 언제와 비교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사독재가 유능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27주년 5·18민주화운동27주년 기념식에서 2007. 5. 18)

□ 민주정부 아니고는 거둘 수 없는 성과,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

평화주의를 확실한 대세로 굳혀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오랜 냉전의 굴

레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의 길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군사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한반도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남북한의 철길도 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격스럽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더욱 굳어지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관계가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협력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주국방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실합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결코 거둘 수 없는 성과입니다.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입니다. 민주세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깎아 내리지 맙시다. 역사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지 맙시다. 지금 이 시간에 민주, 반민주 편을 갈라서 서로 헐뜯고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될 역사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될 역사적 세력이 그렇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께 그리고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27주년 기념식에서 2007. 5. 18)

3. 민주주의 3단계론

□ 민주주의 1단계 과제 - 반독재투쟁

150년 전, 우리는 근대화의 흐름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는 민족의 통합과 자주독립 국가의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건설입니다. 경제의 건설은 일찍 시작되었으나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하고 독재에 짓밟혔습니다. 독재시대의 과제는 반독재 투쟁이었습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민주주의 2단계 과제 - 투명·공정사회 구축과 지역구도 통합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6월항쟁 이후 시대의 과제는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의 유착 구조를 해체하고,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 간의 분열구도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2단계 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민주주의 3단계 과제 -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정착

그 다음 시대의 과제는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되고, 연정, 연합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6월 항쟁으로 보는 민주주의 3단계론

1단계 - 6·10민주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6·10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할 만한 많은 투쟁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엄숙하게 기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주저 없이 승리한 투쟁으로 말할 만한 역사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10항쟁은 승리했습니다. 항쟁 이후 20년간, 우리는 군사독재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 내고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6·10항쟁을 승리한 역사로 주저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역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지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0의 승리는 축적된 역사의 결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많은 항쟁의 역사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전제왕권의 학정에 맞섰던

민생·민권 투쟁,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수많은 민족독립 투쟁, 그리고 군사독재에 맞선 꾸준한 민주주의 투쟁들이 그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의 승리를 보고 일시적인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 당장의 성공에 급급하여 대의를 버리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2007. 6.10)

2단계 - 6월 항쟁은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6월 항쟁은 그 역사적 의미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경제는 개발 연대의 요소투입형 경제를 넘어서, 지식기반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세계와 경쟁하여 당당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은 1987년 세계 19위에서 2005년 12위로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63위에서 48위로 상승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는 24위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1987년 이후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치경제, 관치금융을 청산하여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그 위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6·10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IMF로 인한 1997년 이후의 우리 경제의 지체를 빌미로 민주세력의 무능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염치없는 중상모략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에 관하여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이 단지 경제에만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

의에도 성공한 나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나라의 위상도 높인다는 사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2007. 6.10)

3단계 -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자명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수구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후진적인 정치제도도 고쳐서 선진 민주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선진국다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상 더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개혁의 과제입니다.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 낼 것이 없는 우리 국민입니다. 20년 전 6월의 거리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민주국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갑시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2007. 6.10)

4. 민주주의 2단계 완성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 정경유착 뿌리 끊은 대선자금 수사

대선자금의 수사로 부정한 정치자금의 고리를 철저히 파헤쳐 돈 선거의 뿌리를 끊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차떼기 같은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고 해 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평점을 받을 만큼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국민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난 권력기관

권력기관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본연의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국정원의 정치사찰, 뒷조사, 도청은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나서서 정치자금을 거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군, 경찰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량한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권력도 줄었습니다. 당의 인사나 공천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더 당도 국회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권은 없습니다.

이제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언론특권과 횡포를 막기 위한 노력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국민의정부에서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권력형 비리 없는 투명한 사회 건설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슨 사건이 나고 비자금이나 나올 때마다 정관계 로비라는 말이 나오고 청와대누구, 대통령 측근 누구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설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생각하며, 가슴을 조였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도 투명하게 제도화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나 한두 사람의 측근이 인사를 농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무직 인사에 대한 정치적 시비는 많지만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장군인사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뒷말이 없습니다.

권력사회 뿐만아니라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상위 39퍼센트 수준에서 2005년 상위 25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2단계 민주주의는 1987년 체제의 역사적인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는 문민 정부, 국민의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성과를 물려받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민주세력은 1987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 쓰고 있어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약 10년간 정권의 성격을 말하기 어려웠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1997년 마침내 완벽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로 역사의 대의를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창의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큰 일을 민주세력보다 누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우리 경제는 체질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개발독재의 획일주의와 유착경제의 잔재를 신속하게 청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1987년보다 나라의 경제적 역량이 훨씬 더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진국 속에서의 순위도 훨씬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규모, 과학기술, 산업경쟁력, 환경, 문화 분야 이 모든 분야에서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꽃피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라야 의욕 넘치는 시장, 혁신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복지투자를 사회투자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사회를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2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2007. 5. 18)

□ 힘겨운 ‘투쟁의 시대’ 거쳐 ‘개혁의 시대’ 성공적으로 이끌어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랜 세월,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고문과 투옥, 살인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잔인한 독재정권에 맞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투쟁의 시대’를 걸어 왔습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 지금까지는 권력의 남용과 권위주의,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같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많은 저항과 갈등이 있었으나 민주주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른바 ‘개혁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4·19혁명 47주년 기념식에서 2007. 4. 19)

5. 민주주의 3단계를 위한 제언

□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대중 민주주의 시대로

노무현이 뭐했냐고 한다면, 감히 부조리의 핵심에 들어와 유착과 부조리의 핵심적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저비용 정치를 구현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유착구조의 해체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엘리트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가 대중적 토대 위에 섰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입니까.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합니다. 투명한 정치, 투명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한 사람보다 열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의를 목표로 한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연수특강에서 2004. 1. 10)

□ 규범 위에 있는 모든 권력을 규범 아래로

지금 저는 야당이라는 정치세력, 우리 한국사회 일부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성의 정치 사회 문화 속에서 문화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심한 마찰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찰은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대중적 흐름과 기존의 우리 사회의 질서 사이에 있어서의 마찰과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초를 1987년 6월에서 등장했던 우리 대중적 동력과 2002년 저의 선거 때 나타났던 국민적인 참여의 바람을 시대적 의미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대통령이 된 역사적 의미이고 지켜 나가야 될 저의 역사적인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을 규범의 틀 속에 돌이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규범 위에 있던 권력을 규범 아래로 자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권력의 결탁과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법질서에 의해서 견제되는 사회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의 조건을 갖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합리화되고 투명화되었다는 수준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역사

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2006. 2. 26)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 경제가 옛날에 관치경제, 관치금융의 시대를 벗어나 민간주도 경제로 가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관치금융이었습니다. 관치금융시대에 외환위기를 맞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경제가 확실한 시장경제, 민주주의 두 축을 기반으로 발전해 간다는 전략을 다시 세우고 기업·금융·노동·공공, 네 개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1998년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개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제가 백 동원하고 정경유착하고, 뒷거래하고 특혜 받고 이런 방식의 경제가 아니라 실력대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위에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세계 경제흐름을 빨리 내다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제 질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도 그 밖의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졌을 때, 그때 비로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라는 것이 더 잘 작동하게 돼 있고, 그래야 우리 한국경제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가 됩니다.

(시드니 동포 간담회에서 2006. 12. 7)

□ 대화와 타협, 상생의 민주주의 실현할 때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과거 1970~80년대에는 부당한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

의의 과제였습니다. 1987년 이후에는 권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먼저 한 발 양보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 줘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노·사·정 대화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사고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1. 15)

한국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인,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통합의 민주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민주주의입니다. 지역주의 극복, 협상 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약속과 책임을 존중하여 신뢰성이 높은 사회, 서로를 인정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통합력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권력을 물리친 데 이어, 정경유착, 반칙, 특혜와 같은 특

권 구조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 소비자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될 때 그 경제가 민주주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소비자 민주주의가 성립될 때 그 정치가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구매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치의 소비자를 유권자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유권자로서 선거와 투표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주권이 정치의 소비자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던 시절엔 자유·평등을 내걸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거는 국가주권 사상에 기반한 정치이념이 1차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있어야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만이 비로소 민주주의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보의 평등상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

다. 그리고 소비자의 주권이 시장에서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지면 민주주의 성숙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가치와 관계없이 오로지 분산된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소비자 주권의 사회정치가 경제의 영역 즉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능동적이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 등의 다양한 가치가 지향된다면 그것이 참 민주주의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대표 및 인터넷 서비스책임자 오찬에서 2006. 6. 12)

□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

경제문제에서 소비자주권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 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각성된 행동, 단결된 행동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와 같이 대처하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역시 시민 민주주의, 시민주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참여,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8회 노사모 총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7. 6. 16)

□ 진보적 시민 민주주의를 제안하며

사인할 때 저의 표어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 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역사적 개념이어서 이 시민에는 옛날에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계급만 포함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포함 안 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시민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민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항상 희망이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뭘 구체적으로 해 보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 봅시다, 어디서 따로 만나서 깊이 있는 생각도 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벤처기업인 특별강연에서 2007. 10. 19)